



# 북·중·러 접경지대의 소지역주의와 초국경 이동에 대한 이해

신범식 엮음, 고가영·김민환·박철현·방일권·세르게이 세바스티야노프·이애리아·  
이창호·이화·조영관·허명철 지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도서출판 이조, 2020)을 읽고

이창주 아주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며

『북·중·러 접경지역을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이라는 제목의 본서는 제1부 「북·중·러 접경지역과 소지역주의 전략」, 제2부 「초국경 인구이동과 공간의 재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제목에 따라 ‘소지역주의’와 ‘초국경 이동’의 키워드로 책이 구성된 것이다.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엮은이인 신범식 교수가 초국경적(Transnational) 네트워크 시대에 북·중·러 접경지역의 ‘자연경제구역(NETs)’과 ‘중층적 상호작용’에 방점을 둔 연구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맞춰 제1부는 러시아와 중국 지역의 개발전략, 제2부는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 조선족 해외이주,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 연해주 내 북한 노동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엮은이를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이지만, 엮은이가 제시한 연구방향에 부합되게 연구결과물의 완성도도 높았고, 상이한 결과물의 배열이 잘 연결되어 스토리텔링도 자연스러웠다.

본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1부에서 1장 세르게이 세바스티야노프(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 2장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3장 허명철(연변대 교수), 4장 박철현(국민대 연구교수) 순으로 연구결과물을 배열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현지-국내 전문가의 글을 교차로 책을 배열함으로써 현지 전문가들의 글을 먼저

읽고 국내 전문가의 글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1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개발전략과 인프라 개발에 대한 내용을 통해 그 공간 플랫폼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제2부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초국경 인구이동에 대해 시간의 배열과 공간에 배열에 맞춘 살아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훈춘이라는 공간 내 유동인구정책, 조선족, 고려인, 북한인을 망라한 내용 정리로 본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서평자는 2012년부터 중·러, 북·중, 북·중·러, 중·몽 접경지역에 현장답사하며 해당 지역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을 확인하고 중국, 러시아 측의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이런 이유로 본서에 대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독할 수 있었고, 쉽지 않은 자료 수집과 인터뷰 자료 정리에 경의를 표한다. 본서의 구성별로 서평의 내용을 진행하겠다.

## II. ‘서장: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읽고

연길을 거쳐 훈춘으로 이동하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하산으로 이동하건 북·중·러 접경지역에 도착했을 때 동북아 국제정세의 흐름을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다. 2013년 12월 12일,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사형 집행 당한 뒤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서평자는 훈춘 관하세관을 거쳐 북·중·러 접경지역인 방천의 용호각으로 차량 이동 중에 검문을 받고 신분증 검사에 한국 여권을 제시했다가 출입 제한을 받은 적도 있다. 국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본서 제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논리’와 ‘안보/치안의 논리’가 공존하고 충돌하고 있음(199쪽)을 느낄 수 있다. 비유해 말하면, ‘안보/치안의 논리’가 발동하는 현실에 발을 딛고, ‘경제/발전의 논리’라는 이상에 손가락을 가리키는 형국이다.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부침을 거듭하는 정세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이유는 역은이의 표현대로 “이동과 흐름의 힘”을 통해 지역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 중 하나”(10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북·중·러 소지

역협력의 형성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계로 확장되어 환동해경제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는 환황해-환동해를 잇는 교량형 한반도의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지역의 ‘안보/치안의 논리’가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도, 적지 않은 한국 연구자들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의 논리’ 형성을 위해 본 지역에 발걸음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연구서와는 다르게 국가가 아닌 중층적 상호작용에서의 미세적 흐름을 논의하고자 했던 본서의 서장은 중요한 접근법이라 생각한다.

서평자가 북·중·러 접경지역의 소지역협력을 국제관계학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 처음 생각했던 것은 통합이론이었다. 통합이론은 유럽통합 모델 분석에 활용되었던 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미트라니(D. Mitrany)가 주장한 기능주의 통합이론이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은 비주권적 영역에서 상호의존이 어느 정도 심화되면 분기지점을 거쳐 정치적 영역 혹은 주권적 영역에 있어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스(Ernst Haas)가 주장한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이다.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은 기존의 기능주의의 주장에서 비정치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구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했고, 통합주체는 결국 ‘관료적 그룹’이라 주장했다(Baylis et al., 2008.).

통합의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논쟁은 본 지역에서도 해당된다. 북·중·러 각국들이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정부를 주체로 보는 신기능주의적 분석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접경지역 개발에 있어 주권을 일부 제도에 양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정부 영역에서 논의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본 지역 개발의 역사를 보면,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계획관리위원회” 체제로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당시 문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였다. TRADP는 북·중·러 3개국의 조정위원회와 북·중·러+한·몽 5개국 협력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화된 정부 간 조정기구’를 설립되었다(박지연, 2015).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고, 대신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TRADP 개발이라는 ‘경제/발전의 논리’는 불안정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안보/치안의 논리’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본 지역의 역사적 사실

은 결국 북·중·러 국제관계 층위, 그리고 북·중·러 각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에 연구자들이 천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했다.

본서의 서장에서는 통합이론이 아니라 신제도주의를 재해석하면서 본 지역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엮은이는 신제도주의의 특징을 ‘단일체(monolithic entity)’로서의 제도가 아닌 ‘복합체(complexes)’로 해석하고 구조-제도-행위 간의 연계를 설명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행위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과정적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국가·중앙정부 중심적” 행위자 간의 관계보다 “소지역 내에 존재하는 상호교류”의 압박 혹은 다양한 개체별 행위자들의 중층적 상호작용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지역적 협력과 통합에 주안점을 두어 본 연구서를 구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다(14-15쪽). 평면적인 접근보다는 입체적인 접근, 단일적 제도보다는 복합적 제도, ‘위에서 아래’로의 하달보다는 ‘아래에서 위’로의 통합 요구에 주안점을 두어 미시적 사례 접근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복잡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임계점을 형성하는 프랙탈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 프랙탈을 형성하는 ‘이동과 흐름의 힘’, 중층적 상호교류에 천착하며 본 지역의 ‘경제/발전의 논리’를 분석하자는 것이다.

본서의 전반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엮은이의 의도대로 ‘북·중·러 접경지역과 소지역주의 전략’, ‘초국경 인구이동과 공간의 재구성’은 기존의 국가-국가 간의 평면적 접근이 아닌 러시아, 중국의 국내 이슈,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중층적 상호교류를 다각적으로 엮어 내고 있다.

### III. ‘제1부: 북·중·러 접경지역과 소지역주의 전략’을 읽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은 두만강 하류라는 동일한 지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관점, 중국의 관점, 북한의 관점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해주 연안의 항만을 연계하며 아태지역으로의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중국은 훈춘 지역을 창구(게이트웨이)로 삼아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 자루비노, 슬라비얀카, 북한의 라진항, 청진항과 같은 동해안의 양항들과 연계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빌려 해양진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이런 중국의 동해 진출,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의 전략을 이해하며 라선특별시의 개발은 견인하고자 한다.

북·중·러 접경지역은 두만강 하류지역만을 바라보며 지도 위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 협의적 의미에서 소삼각지대 포시에트(러)-훈춘(중)-라선특별시(북), 대삼각지대 블라디보스토크(러)-연길(중)-청진(북)의 삼각지대를 북·중·러 접경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개발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구심점으로 하는 배후지역까지 살펴봐야 한다.

러시아는 TSR 라인을 기본 라인으로 삼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프리모리에 계획을 통해 북·중·러 연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모리에-1 계획은 블라디보스토크/보스토치니/나훗카 항에서 우수리스크, 포그라니치니(러시아), 수어편허(중국)으로 연결되는 경제회랑이다. 프리모리에-1은 중국의 하무수이둥(하얼빈-무단장-수이편허/둥닝) 라인과 연결된다. 프리모리에-2 노선은 자루비노-마할리노(러)-훈춘(중)/라진(북)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다(서종원·한은영, 2018) 프리모리에-2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하역) 선도구와 직접 연결된다. 프리모리에-2는 블라디보스토크 측의 TSR과 직접 연결이 되고, 중국 측 하무수이둥, 창지투는 다렌-선양-창춘-하얼빈-만저우리 등으로 이어지는 만주중단철도(TMR)와 직접 연결되며, TMR은 만저우리를 건너 러시아의 자바이칼을 지나 치타에서 TSR과 연결된다. 종합해 보면, 북·중·러 접경지역은 중국의 창춘/하얼빈을 거쳐 만저우리를 경유해 TSR과 만나고 그 TSR은 남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면서 일종의 환 모양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다렌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일종의 양 기둥으로서 TMR(환황해경제권 연결)과 TSR(환동해경제권 연결)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의 훈춘, 수이편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의 라선특별시 모두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해 경제적 혜택을 받고있을 것이라 판단하기 쉽지만 상기한 인프라의 연결에도 본 지역의 경제개발은 더디게 발전되었다. 군사·안보적 차원의 불안정성도 존재했지만,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다. 먼저, 인프라 건설에 따른 도시 공동화 현상이다. 개인, 기업의 경우 인프라

가 연결되면 주변의 대도시로 이동하려 한다. 일반 지방도시에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해당 도시권의 관광사업은 활기가 있을지라도 교육, 소비, 기업문화는 비교우위가 높은 서울로 옮겨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훈춘은 창춘으로,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랄산맥 서쪽의 유럽권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군사·안보적 차원의 연장선에서 불안한 정세로 인해 통계자료의 불투명성이 존재했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통계자료에 근거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통관자료를 포함한 통계자료는 정보보안 이유로 비공개이거나 신뢰성이 낮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구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중국은 훈춘을 창지투의 대외개방 창구로 그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2013년 5월 7일 훈춘시 공안국이 「두만강구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로 지정했다(199쪽). 러시아는 2018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극동연방관구의 청사를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고, 러시아 자유항 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특구를 지정했다(92쪽). 북한의 경우도 2010년 1월 나선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북·중·러 접경지역 국제 개발에 제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렇듯, 도시 공동화 현상에 봉착할 수 있었던 상황은 각 국가들의 제도적 지원에 맞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하무수이둥-프리모리예-1, 창지투-프리모리예-2를 연계하는 전략을 공식문서인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위한 행동과 전망』에 중러 해륙복합 연결이라는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명시한 바 있는데, 중국이 환동해경제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 사례라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유라시아경제회랑, 극동지역 및 북극해 지역 개발 등에 있어 협력을 구하면서 해당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항만에서는 환경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석탄 물류의 경우 북한 나진항 3호부두를 통해 처리하는 등의 러시아-북한 항만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이슈이다. 러시아는 더 나아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D)을 통한 다자간 개발에 적극적인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오히려 ‘두만강’보다는 ‘아무르강(흑룡강)’ 개발로 개칭하여 개발 범위를 러시아 측으로 넓히고 그 개발협력

은 다자가 아닌 중러 양자 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모습들도 서평인이 직접 해당 지역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서 제1부 역시 각 지역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각각의 개발계획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장에서는 세르게이 세바스티야노프 교수의 “러시아 극동개발 계획과 러시아 변경지역의 변화” 편을 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다시 말해 ‘선도개발 지역’, ‘자유항’과 같은 현재의 극동지역·연해주 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 지역의 역사와 산업발전 현황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제2장에서 조영관 선임연구원은 “북·중·러 초국경 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 러시아의 교통 물류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 프리모리에 계획을 포함한 대외 교통물류 협력 분야를 지도와 그림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며 정리했다. 제1부 내 다른 전문가들이 각 지역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내용을 서술했다면 제2장은 초국가적(Transnational) 연계 관점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중국 훈춘에 위치한 한국의 ‘훈춘 포스코현대 물류단지’의 사업을 예로 들며 훈춘-자루비노항 연계 사업 추진, 러시아의 항만 현대화 사업 참여, 북극 개발 및 북극항로 관련 사업 등의 정책 제언도 눈여겨볼 내용이라 생각한다.

제3장에서 허명철 교수는 “창지투개발전략과 연변의 지역구도변동에 대한 전망: 자치주와 연용도 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용도(연길-용정-도문)의 연계도시와 훈춘의 행정지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2009년 8월 30일 국가급 개발전략 차원으로 승격한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지역에 있어 훈춘을 개발개방 “창구(개이트웨이)”, 연용도 지역을 “전연(前沿; 전진기지)”, 장춘과 길림을 “복지(腹地; 배후지)”로 삼는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창지투 선도구 지역의 발전은 연용도, 훈춘, 둔화 등이 지구급 도시격으로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용도 지역은 각 도시별 산업기능의 연계 배치와 도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연변의 행정 지각변동 및 민족자치권리 영위문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장에서 박철현 교수는 “초국경도시 훈춘 변화의 중국적 요인: (신)동북현

상과 지린성 ‘삼화삼동’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훈춘은 여러 국가들의 국경에 접하고 있는 ‘초국경’ 도시이지 ‘무국적’ 도시는 아니다”(155-156쪽)라고 강조하며 훈춘 역시 중국의 동북현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지린성 차원에서 제기된 ‘삼화삼동(三化三動)’을 틀로 훈춘의 향후 발전 전략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삼화’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이고, ‘삼동’은 투자 촉진, 프로젝트 선도, 혁신을 통한 동력 제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 담론과 국내문제 담론의 균형적 시각을 통한 훈춘 도시변화에 대한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 제1부에서는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 연구에서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현지 지역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엮이면서 원래 의도했던 연구방향에 부합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논의에서 북한 측의 상황을 정리한 글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차원에서 한국, 몽골, 그리고 일본의 입장도 함께 정리했다면 보다 중층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각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1장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솔레르스의 주요 협력사는 대한민국의 쌍용이었으며, 이어 일본의 도요타도 합류하였다. 2012년 일본의 마쓰다가 솔레르스의 파트너로 합류했다”면서 솔레르스는 우랄 서쪽으로 완성차량을 철도로 운송하며 운송 비용을 할인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61쪽). 실제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블라디보스토크나 자루비노를 통해 TSR로 운송되고 있는데 북·중·러 접경지역과 환동해경제권의 관점에서 이런 중층적 상호작용을 하나의 연구주제로 포함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IV. ‘제2부: 초국경 인구이동과 공간의 재구성’을 읽고

제2부는 초국경 인구이동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학적 접근법이 함께 초국경적인 인구 이동과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본서의 제2부를 읽으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반추해 보았다. 첫째, 훈춘에 관한 기억이다. 제5장에서 훈

춘의 유동인구와 외국인 정책 정책을 설명하며 인재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논리’, 인재가 아닌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안보/치안의 논리’가 동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훈춘시가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이 적용되는 곳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다(198-199쪽). 훈춘 도심과 북중접경지역 주요 통관 지역의 거리가 약 42km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동인구가 시내에 진입해 활동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행정 관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단동의 경우 시 구도심 자체가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어 ‘안보/치안의 논리’가 쉽게 노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동과 달리 훈춘의 경우 북한의 나진항,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에 물류적으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보/치안의 논리’가 ‘경제/발전의 논리’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했다. 유동인구나 외국인유입에 있어서도 이런 물리적 관점, 의존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흥미로울 것 같다.

둘째,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黑河)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이다. 2016년 11월, 중국의 흑룡강변 국경도시 헤이허에 방문한 적 있는데, 그 건너편이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라는 도시다. 중러 간 국경 획정 역사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언급되던 아이훈 조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하다. 헤이허 도시에서 차량을 렌트해 돌아다니는데, 차량 운전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운송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꺼냈다.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단동으로 이동하고, 단동에서 2대의 버스로 대기하다가 1대당 2명의 기사들이 번갈아 무박으로 헤이허에 도착한다. 그리고 헤이허에서 배를 타고 건너 러시아에 별목공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했을 때에도 직접 호텔 건물 공사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먼 발치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이 북한 노동자들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초국경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2017년 시행된 대북제재 이전의 내용이다. 이런 무용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중·러 간의 이동이 복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며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줬다.

제2부는 이런 서평인의 개인 경험에 더해 세부적인 중층적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제5장은 김민환 교수와 박철현 교수가 “북·중·러 접경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훈춘의 도시 정체성과 유동인구 정책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훈춘의 경우, 유동인구는 한편으로 ‘고학력 고소득 인재’로서 표상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험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모순되는 두 특성이 동시에 표상되는 것은 ‘특구’와 ‘변경’이라는 훈춘의 이중적 성격 때문”(219쪽)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 파트의 내용을 잘 요약한 글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훈춘은 외국인을 수용하여 국제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며, ‘안보/치안의 논리’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긴장이 이 지역에 미칠 때 한시적으로 작동하고, ‘경제/발전의 논리’가 지배한다(219쪽)고 분석하고 있다.

제6장은 이화 교수가 “중국 조선족 해외이주의 흐름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족의 이주 역사와 각 지역별 조선족의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으로 이주하던 조선족의 상황을 1980년 혹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분석해 정리했다. 1949년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동북지역 내 폐쇄된 지역에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던 조선족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 중소 갈등의 완화, 냉전의 종식에 따라 해외진출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초반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북한과 러시아에 보따리상으로 경공업품을 거래하던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취업하고자 해외 이주를 경험하게 되고, 일본으로는 유학생으로서 출국하던 모습의 이주 패턴을 보여 왔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제7장은 고가영 교수가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초국경적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리스크에서 고려인,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삶의 모습을 인터뷰 자료까지 포함해 설명해 준 자료다. 특히, 우수리스크 상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초국경적인 만남을 경제활동의 공간(중국시장, 건설노동 현장), 사회활동 공간(고려인 문화센터, 로지나 서당, 동북아평화기금의 우정마을, 고려마을 등)으로 구분 짓고 이를 목차로 삼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상호작용 양태를 구분 짓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06년 11월 15일 총리인 미하일 프라드코프가 서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소매 금지법”(276쪽)이 시행되면서 중국인들의 러시아 내 점포 소유가 불가능해지면서 조선족인 진 옥사나는 실질적인 주인이지만 명목상으로 종업원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환이주한 갈리나는 실제 종업원이었으나 법적으로 가게 주인

이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277쪽). 또한, 황 올렉과 초이 이리나의 경우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 귀환이주를 감행한 고려인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북한 태생의 할머니, 그리고 우수리스크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마치고 연변에서 학교를 다니는 새로운 세대의 아들”의 이야기도 초국경 인구이동으로 바라본 새로운 공간 재구성에 부합된 내용이라 생각한다.

제8장은 이애리아 교수, 이창호 교수, 방일권 교수가 “초국경 공간,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실태를 인터뷰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 연구자요다. 시기별 북한 노동자 파견의 특징을 정리한 것도 이상적이었지만, ‘계획분’, ‘청부’, ‘도급제’ 등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로 상납하는 부분과 자신이 러시아 내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 근무하는 모습을 자세히 인터뷰와 함께 설명해 주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이주라기보다 자발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에 귀국하더라도 다시 다양한 방법을 거쳐 러시아에 송출되는 이주회로의 편입 현상도 설명해 주고 있다.

제2부는 서평인의 현장 경험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보완해 주었다. 1980년대까지 동북지역에 갇혀 있던 조선족들이 폭발적으로 국내외로 이주하는 모습,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이슈, 우수리스크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양태 등은 다시 현장에 가게 되면 더 고민하며 들여다볼 의제를 던져 준다.

제2부의 내용을 읽다 아쉬운 점은 본 지역의 인구이동에 대한 부분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북한인, 조선족, 고려인 등을 망라한 인구이동이 어떻게 공간을 재배치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용이했다. 그러나 중국 한족의 러시아 내 모습, 러시아인들의 초국경 인구이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본서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협상대표들은 러시아가 자금만 받고 중국 물품은 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이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고 경계하는 모습,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이슈 이후 중국의 이런 모습이

가속화된다는 모습도 이 지역의 중층적 상호작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러 관계는 분명 밀월관계이지만, 이렇듯 미세한 중층적 상호작용에서는 다른 흐름도 보이고 있는 점은 본 연구서와도 부합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V. 서평을 마치며

서평자도 관련 지역들을 꾸준히 현장답사해 왔던 입장에서 본서의 내용들에 크게 공감했고, 많은 부분에서 좋은 학습을 하였다. 그러나 본서의 엮은이와 저자들의 연구결과물에 크게 동의하며 서평을 위한 정독을 진행했지만, 차마 서평이 오랫동안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바로, 코로나19, 각국의 민족주의적 성향 만연, 안보위기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구조의 경색국면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구미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서 한국-러시아 간에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서평을 작성하는 기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침공을 감행했고 그 전황도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거래를 중단, 에너지자원 거래 중단 등 제재의 폭을 전면화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대러제재에 동참해 한러, 남북러 경협에 대한 청사진도 담보상태를 넘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중관계는 2015년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해 이른바 중국발 ‘사드보복’이 생기면서 양국관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 강화와 함께 김치, 한복 등 원조 논란으로 악화일로를 걸던 양국관계는 2022년 2월 4일에 개최된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심판 오심 논란으로 양국 혐오 감정에 정점을 찍었다. 남북관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의 데탕트가 유지되다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미국-북한 간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며 화해 무드가 깨지게 되었고,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2022년 3월 24일 북한은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며 남북관계 역

시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요컨대, 본서에서 논의하는 북·중·러와 한국의 관계는 모두 경색국면이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중·러 간의 관계 역시 갈등구조에 있는 것도 본서의 시의성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다. 한국의 정권도 보수정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북·중·러에 대한 관여(Engagement) 정책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북·중·러와의 협력이 낙관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으로 한·중·러 경험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의 국제사회 구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노선이 형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부의 선택지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중요성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러 소지역 협력이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 미래를 이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역은이의 견해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신범식, 2013). 단기간에 현재 직면한 글로벌 구조의 대전환이 발생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동북아의 평화국면에 있어 북·중·러 소지역 협력이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서 제7장에서 고가영 연구교수는 “초국경적 이동과 흐름을 바라보는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주변은 후진적 공간만이 아니라 창조성과 혁신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재인식될 수 있다”(256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왔다. ...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신용복 교수의 발언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신용복, 2006). 결국 글로벌 구조가 갈등에서 평화로 대전환하기 위한 동력은 변방의 창조성과 혁신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본서의 가치는 연구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투고일: 2022년 3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1일

## 참고문헌

- 박지연. 2015.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현황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 연구센터 연구보고서.
- 서종원·한은영. 2018. 『프리모리에 국제운송회랑 개발 현황 및 협력 방향』. 동북아북한교 통물류 이슈페이퍼. 제2018-04호.
- 신범식. 2013.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 『국제정치논총』 53, 427-463.
- 신용복. 2006. 『변방을 찾아서』. 돌베개.
- Baylis, John,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2008.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